

<국문요약>

최근 10년 동안, 한국의 사이버 정치현상을 둘러싼 연구들이 적지 않게 축적되었다. 본 연구는 사이버 정치현상을 세 가지 범주 - (i) 인터넷 활용의 정치 (ii) 인터넷 안의 정치 (iii) 인터넷에 영향을 주는 정치 - 에서 기존 연구물들을 검토한다.

기존 연구들은 인터넷의 확산이 한국의 정치과정에 미치는 영향들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체계적인 사이버정치학의 정립과 발전을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연구 분야의 균형적 발전이 필요하다. 연구 주제의 측면에서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은 '인터넷 활용의 정치'에 편중되어 있으며, '인터넷 내의 정치'와 '인터넷에 영향을 주는 정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정보자원의 분배와 규제는 정치적 갈등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분야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는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이버 정치현상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들이 유기적 연관성을 지니면서 진행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 결과, 사이버 정치현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 및 체계적인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셋째, 사이버 정치현상에 대한 비교론적 연구가 필요하다. 인터넷은 가치중립적인 기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기술을 채택하고 이용하는 방법 및 방향, 온라인 공간의 윤리와 규범의 내용, 그리고 인터넷 자원을 둘러싼 경쟁과 인터넷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내용은 국가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즉 정치체제, 정치문화, 정치과정의 특징, 경제적 수준 등과 같은 지역적 특징 변수들을 고려한 비교론적 연구들을 토대로 다양한 가설들의 창출과 검증을 통해 사이버 정치현상 연구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고 심화시켜야 할 것이다.

[주제어] 사이버정치, 인터넷 활용의 정치, 인터넷 안의 정치, 인터넷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김 용 철 (Kim, Yong-cheol) *

(E-mail : kimyc@jnu.ac.kr)

논문접수일 : 2009년 9월 24일

논문심사일 : 2009년 10월 10일

게재확정일 : 2009년 11월 25일

* 학위취득대학 :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
현직: 전남대학교 교수

I. 서론

오늘날 한국정치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출현과 대중화로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시민들은 온라인 공간(인터넷 게시판 및 토론장)을 새로운 정치참여의 장으로, 그리고 인터넷을 새로운 정치참여(사이버행동주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당들은 당내 공직후보자 선출에 전자투표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으며, 정당 지도자들은 자신의 웹사이트·블로그·미니홈피 등을 통해 지지자를 동원하거나 팬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의회 역시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유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네트워크의 끊임없는 확장과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생산 유통·소비의 증가는 인터넷의 내재적 가치를 더욱 상승시켰으며, 더불어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켰다. 즉 인터넷의 일상화는 인터넷과 정보유통을 둘러싼 새로운 갈등 및 규제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표현의 자유 vs. 프라이버시 보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며, 인터넷 게시판의 ‘실명제 vs. 익명제’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법률적 규제이다. 요컨대, 인터넷의 확산이 새로운 정치현상을 낳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사이버정치’ 현상이 학자들의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이다. 초기 학자들의 논의는 전자민주주의를 둘러싼 서구 학자들의 논쟁(낙관론 vs 회의론)들을 소개하거나,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이라는 규범론적 관점에서 인터넷의 정치적 활용의 방향과 내용을 다루었다. 즉 민주주의를 둘러싼 정보통신기술의 양면성(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에 주목하면서, 사이버공간의 민주화를 위한 기술적 요건(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 네트워크의 신뢰성 확보 등), 제도적 요건(정보접근권 보장, 비용의 저렴성, 통신검열의 철폐, 상업적 압력의 배제 등), 시민적 요건(분별 있는 시민 등)들에 대한

담론적 분석의 초점이 맞춰졌다(이유진 1997; 강상현 1999; 권기현 1999). 이러한 규범론적 연구가 네티즌의 정치행태 및 인터넷의 정치적 활용에 관한 실증적 연구로, 그리고 정보자원을 둘러싼 사회구성원의 갈등 및 제도적 규제에 관한 구체적 사례연구로 전환된 것은 2000년대 초반이었다. 인터넷이 우리의 일상생활의 일부가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학문적 관심도 함께 높아갔다. 이에 따라 한국의 사이버 정치현상을 둘러싼 경험적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던 것이다.

최근 10년 동안, 한국의 사이버 정치현상을 둘러싼 연구들이 적지 않게 생산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물들의 내용 검토를 토대로 사이버 정치현상을 둘러싼 연구들의 내용과 흐름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사이버정치 연구의 지평 확대와 질적 심화를 위한 향후 과제를 논의하려고 한다.

II. 인터넷의 확산과 사이버 정치현상

한국 사회에서 인터넷의 양적 확산 및 질적 진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다. 인터넷이 상용화되어 일반인의 인터넷 접근이 가능하게 된 것은 1994년이였다. 초기 인터넷은 이른바 ‘PC통신’으로, 주로 문자 위주의 정보제공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초에 들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이 구축되면서 동영상 및 멀티미디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나아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정보통신기술은 공급자 친화적 웹 1.0 환경에서 수요자 친화적 웹 2.0 환경으로 진화하여 왔다.

인터넷 정보통신기술의 진화에 따른 인터넷 이용자 및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1999년 9백40만명에 달하던 국내의 인터넷 이용자수(만 6세이상)는 2002년에는 2천6백만명, 2004년에는 3천1백만명, 그리고 2008년에는 3천5백만명으로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인터

넷 이용률(만 6세이상) 역시 1999년의 22.4%에서, 2002년에는 59.4%, 2004년에는 70.2%, 2006년에는 74.8%, 그리고 2008년에는 77.1%로 상승하였다.¹⁾

인터넷의 확산과 기술의 진화는 일반시민들의 온라인 활동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2008년 인터넷 이용실태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인터넷 이용자 10명 가운데 8명이 인터넷을 통해 각종 정보 및 자료를 획득하거나 이메일 및 메시지 등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네티즌의 50.2%가 온라인 카페 및 공동체의 이용자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네티즌의 61.3%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이용하고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인터넷의 확산은 과거 우리사회가 경험하지 못했던 정치현상, 즉 사이버 정치현상을 낳고 있다. 마굴리스와 레즈닉((Margolis & Resnick 2000, 8-21)은 사이버 정치현상을 크게 세 차원에서 파악한다. 첫째, ‘인터넷 활용의 정치’(Political Use of the Net)이다. 이는 인터넷 및 온라인 공간의 도구적 활용을 통해 특정 집단들이 각각 자신의 정치적 가치 및 이해를 실현하려는 사이버 정치현상을 의미한다. 예컨대, 특정 정당 혹은 정치지도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동원하는 활동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둘째, ‘인터넷 안의 정치’(Intra-Net Politics)로서 오프라인 상의 정치와 대비되는 온라인 상의 정치현상을 지칭한다. 이는 사이버 공동체의 출현과 소멸, 사이버 공동체의 규칙 형성과 의사결정, 온라인 공간에서 네티즌들의 정치적 역학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셋째, ‘인터넷에 영향을 주는 정치’(Politics that Affects the Net)로서, 인터넷이 제기하는 다양한 공공현안을 둘러싼 오프라인 정치현상을 의미한다. 예컨

1) 국가별로 비교해 볼 때(2007년도 기준), 한국의 인터넷 이용률은 세계11위이며, OECD 회원국들 가운데 가구당 인터넷 보급률(94.1%) 및 인터넷 이용자의 웹페이지 구축률(36.8%)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362-363).

대,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한 지적 재산권과 정보공유의 문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의 문제, 실명제와 익명제의 문제 등을 둘러싼 첨예한 이해 갈등 이슈들이 이에 해당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세 차원에서 그간에 생산된 연구들을 대상으로 기존 연구들이 내재하고 있는 이론적 시각 및 논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하려고 한다. 그리고 기존 연구들은 특정 학술지에 게재된 것들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학술지와 저서들을 대상으로 분석할 것이다.

III. 인터넷 활용의 정치

한국에서 ‘인터넷 활용의 정치’에 관한 연구들은 내용적으로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의 인터넷 활용 가능성과 인터넷의 활용이 정치과정 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1. 시민정치참여

인터넷을 이용한 시민들의 정치참여는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에 기초한 정보습득, 정치토론, 집단행동 등을 포괄한다. 이와 관련한 학문적 쟁점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그 하나는 “인터넷의 확산이 정치참여의 규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인터넷의 확산이 ‘숙의적’(deliberative) 정치참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의 문제이다.

1) 투표참여

인터넷이 시민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싸고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이 대립하여 왔다. 먼저 동원론적 시각(mobilization perspective)으로, 인터넷의 대중화가 정치참여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기존의 정치적 무관심층의 정치참여를 촉진시키며, 나아가 기존 정치적

소외계층에게 새로운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비해, 강화론적 시각(reinforcement perspective)은 인터넷이 정치적 무관심층이나 소외계층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기 보다는, 기존 정치참여 집단들에게 추가적인 정치참여 채널을 제공하게 될 뿐이라고 주장한다. 즉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s) 현상은 정치자원의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기존의 정치참여 형태를 더욱 고착화시킬 것으로 본다.

두 가지 상반된 가설들을 염두에 두고, 인터넷의 '참여' 효과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우선, 네티즌으로 통칭되는 인터넷 사용자 집단의 정치정향과 참여행태에 관한 연구들이다. 이와 관련하여, 황용석(2001)의 연구에 의하면, 네티즌들의 정치사이트 방문 및 활용은 그들의 사회경제학적 지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사이트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의 확산이 기존 정치참여의 기본적인 틀을 바꾸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인터넷의 확산이 기존 정치참여집단의 정치참여를 더욱 촉진하는 반면, 정치적 무관심층 혹은 소외계층의 정치참여를 유발시키는 효과는 매우 빈약함을 의미한다. 즉 강화론적 시각이 현실에 더욱 가까움을 시사한다.

이에 비해, 박선희·주정민(2004)의 연구는 인터넷의 확산이 정치적 무관심층의 정치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들은 2003년 16대 대통령선거 당시 인터넷 대안언론의 역할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 대안언론의 활동이 온라인 의견형성, 정치참여, 그리고 오프라인의 투표관련 행위에 영향을 미쳤으며, 적극적 온라인 정치행위자들이 새로운 의견지도자로 부상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한국 네티즌 집단을 분석한 정연정·조성대(2004)의 연구는 인터넷의 확산이 강화론적 효과 및 동원론적 효과를 동시에 발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강화론적 입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한국 네티

즌들 가운데 대체로 남성의 비율이 높으며, 고학력층과 고소득층이 중심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비네티즌 집단이 기존 매체(신문, TV 라디오)에서 공공문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비해, 네티즌 집단은 인터넷과 기존 매체 모두에서 공공정보를 획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동원론적 입장을 지지하는 증거로 정치적 무관심 층으로 여겨지던 20대와 30대가 네티즌 집단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더불어 네티즌 집단은 비네티즌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실정치 참여에 적극적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역대 선거에서 20대와 30대가 투표참여율이 가장 저조한 정치적 무관심층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특이한 현상으로 파악된다. 왜냐하면, 인터넷의 확산이 정치적 무관심층인 20-30대 유권자들을 정치적 관심층으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발휘함에도 불구하고, 20-30대 유권자들의 투표참여율은 여전히 전체 유권자의 투표참여율 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전체 투표율과 20-30대 투표율 간의 격차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윤성이 2003).

이와 관련하여, 김용철·윤성이(2004)의 연구는 '장기적 동원론'의 입장을 취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온라인 활동이 유권자들의 선거관심도를 제고하는 데 긍정적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접 효과를 지니고 있으나, 온라인 활동이 유권자들의 투표참여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온라인 활동이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도를 제고하고, 증가된 정치적 관심도가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간접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전통적으로 정치적 무관심층 비율이 높은 젊은 네티즌이 온라인 활동에 매우 적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인터넷의 확산이 장기적으로 젊은 네티즌들의 투표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온라인 활동이 매우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20-30대의 투표참여율은 증가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왜 '2030세대'의 투표참여율은 저조한가? 이에 대해 김현우(2005)와 조성대·정연정(2006, 57-58)은 '2030세대'의 전통적 정치참여(투표참여)보다는 온라인 토론 및 온

라인 행동주의(online activism) 등 새로운 정치참여 수단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과 공적 관여를 서로 연결하는 대안적 방법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오디오, 플래시,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기반의 기술 발전이 ‘2030세대’만의 독특한 정치참여 방식을 창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 온라인 정치참여

‘장기적 동원론’의 등장과 2030세대의 ‘대안적 정치참여’의 관점은 (i) 온라인 토론활동을 통한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의 성취 가능성과 (ii) 사이버공동체 활동을 통한 네트워크 정치참여(political participation by network)에 더욱 주목하게 하였다.

(1) 온라인 토론

온라인 토론에 대한 초기 연구는 서구 학자들의 논쟁적 가설들에 입각하여 크게 긍정론과 비판론을 둘러싼 담론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긍정론은 이른바 ‘전자적 공론장’(electronic public sphere) 모델로 표현된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이 네티즌들 간의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활발한 교환을 통해 숙의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윤영민 2000; 홍성구 2001). 즉 인터넷 공간의 특징인 익명성·쌍방향성·개방성은 공적 이슈를 둘러싼 일반시민들의 자유로운 참여와 격의 없는 토론을 가능하게하며, 이를 통해 좀 더 높은 수준의 공적의사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비해, 비판론은 ‘파편화’(fragmentation) 모델 혹은 ‘발칸화’(balkanization) 모델로 표현된다. 비판론자들은 온라인 공간이 ‘공론장’으로 기능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사이버공간은 정제되지 못한 정보가 범람하고 대중여론이 여과되지 않는 채 토론과정에 그대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고, 인터넷의 빠른 속도로 인해 온라인 토론은 신중한 생각 및 고려의 과정을 생략한 채 즉각적으로 진행되기 쉽다고 비판한다. 또한 토론 참여자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기 보다는 자신

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표출하는데 몰두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공론장으로 발전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황근 2001; 김일영 2004; 이한구 2004; 이동수 2004).

두 경쟁적 가설들은 실증적이며 행태적 연구를 촉발시켰다. 초기 경험적 연구들은 주로 사례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총선연대 웹사이트 게시판 분석(윤영철 2000)과 제16대 총선 후보자 사이버 게시판 분석(황근 2001)은, 비판론자들이 예견하였듯이, 대부분의 게시글들이 비이성적이며 대화의 내용이 감정적 충돌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이후 연구들은 “어떤 조건들이 인터넷 정치토론을 이성적이고 숙의적인 토론으로 유인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우선 김종길(2006)은 10개의 인터넷 미디어 토론방에 대한 내용분석 및 네티즌 여론조사에 기초하여 인터넷 공간의 민주주의적 잠재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인터넷 미디어 토론방이 네티즌의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는 시민참여 미디어로 등장하고 있으나, 민주적이고 성찰적인 공론장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즉 근거 없는 정보와 추측, 논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핍글’과 ‘댓글’이 온라인 게시판을 압도하고 있으며, 토론이 상호 이해와 협의를 통해 공론형성에 기여하기 보다는 극단적 입장으로 양분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 토론방을 ‘숙의적’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i) 참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토론방의 구조적 재디자인, (ii) 시민들의 인식변화와 소통역량의 강화, (iii) 상호존중과 관용의 문화 등을 제시한다.

또 다른 연구들 역시 인터넷 공간에서 ‘숙의적 커뮤니케이션’의 가능 요건을 제시한다. 실험방법을 이용한 게시판 내용분석 결과에 의하면, 인터넷 공간의 익명적 조건이 보다 많은 네티즌들의 토론 참여를 촉진하며, 토론 중재자의 적절한 개입(의제에 대한 정보제공 및 토론방향의 제시)과 토론효능감 강화장치(예: 토론 참여도 및 공헌도에 평가지수)가 토론의 품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고 한

다. 요컨대, 인터넷 토론방의 구조적이며 규제적 조건들을 적절히 조합함으로써 온라인 공간을 사회적 공론장으로 승화시킬 수 있음을 주장한다(이준웅·김은미·문태준 2005; 이준웅·김은미 2006).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류성진·고홍석(2007)은 온라인 게시판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토론능력 향상이 근본적임을 지적한다. 또한 정영수(2008)는 온라인 토론공간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온라인 공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감이 조성되어야 하며,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온라인 게시판이 디자인되어야 하며, 더불어 온라인 토론문화의 합리화를 위한 교육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2) 온라인 사회운동

온라인 토론과 더불어, 오프라인 공간의 전통적인 정치행동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온라인 행동주의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높아졌다(백옥인 1999; 조동기·오영석·조희경 2001). 이들 초기 연구들은 인터넷이 어떻게 사회운동에 활용되고 있으며, 인터넷과 사회운동의 결합으로 인해 기존 사회운동방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분석의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온라인 사회운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외국 사례에 대한 소개에 치중한 까닭에, 한국사회에서 등장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

한국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사회운동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민경배(2002)와 고동현(2003)의 연구이다. 이들 연구는 한국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사회운동이 온라인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이 결합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네트워크가 새로운 사회운동의 주체로서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들은 사회운동의 유형화를 통해 온라인 사회운동의 발달, 전개, 결말에 이르는 역동적 과정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기 연구들과 확연히 구분되었다.

한국 사례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사회운동 연구는 이내 NGO들의 인터넷 이용 실태 연구, 다양한 이론적 시각들의 검토를 위한 사례연구 및 비교연구, 그리고 초국적 사회운동의 연구로 이어졌다. 첫째, NGO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실태 연구(김의영 2004; 김종길 2005; 김명아 2007)에 의하면, 한국의 NGO들은 대체적으로 인터넷을 오프라인 활동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높고, 인터넷의 활용 자체가 전통적이고 위계적 운동조직의 변화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둘째, 이론 검증을 위한 비교연구들에 의하면,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은 사회운동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잠재력을 지니고 동시에, 사회운동의 ‘황폐화’를 촉발할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인터넷의 활용은 사회운동을 둘러싼 정치적 기회구조를 확장시키고, 운동자원의 추출과 결합에 기여하며, 운동연대감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사회운동을 비이성적 온라인 포퓰리즘(online populism)으로 이끌 수 있는 위험성도 함께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장우영 2006; 김용철 2008a). 셋째, 인터넷 네트워크에 기초한 ‘초국적 사회운동’의 가능성과 그 의미를 살피는 연구이다. 초국적 사회운동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가 주체가 되는 운동인 까닭에, 네트워크 조직자의 역할,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성과 평등성, ‘디지털 디바이드’의 극복이 ‘초국적 사회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일차적으로 넘어야 할 과제로 제시한다(윤민재 2005; 김은규 2005; 정연정 2008).

2008년 발생한 촛불시위는 온라인 사회운동을 둘러싼 새로운 연구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특히 (i) 온라인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 간의 상호작용이 사회운동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ii)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한 새로운 정치참여집단의 창출 여부를 둘러싼 학문적 관심을 촉발하였다. 첫째, 온-오프 상호작용 연구들은 사회운동 네트워크의 발전 양상 및 동학에 분석의 초점을 맞췄다. 송경재(2009)는 온-오프 상호작용을 온라인 행위자와 오프라인 행위자 간의 정보네트워크, 연계네트워크, 참여네트워크 등 중층적 네트워크의 형성과 활동이라는 측면

에서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운동네트워크 형성은 온라인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김용철(2008b)의 연구에 의하면, 활발한 온-오프 상호작용이 느슨하게 연계된 수평적이며 다중심적(polycentric)인 운동지도부를 창출하여 외부의 도전과 탄압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회운동의 적응력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생성하고 있으며, 동시에 물리적 행위와 전자적 행위의 교차는 운동의제를 효과적으로 확산시켜 운동연대감 및 동원력을 강화시키고 사회운동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기여하였음을 보여준다.

둘째, 인터넷의 확산이 네티즌의 정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다. 조기숙·박혜윤(2008)의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 2008년 촛불집회의 참여자들은 일반 국민들과 사회경제적 배경 및 태도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집회 참여자들은 대재 이상의 고학력 집단으로 인터넷에서 주로 정보를 획득하고 있으며, 개인주의적이며 탈물질주의적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자들은 2008년 촛불집회를 물질주의를 대변하는 정부와 탈물질주의적 시민들 간의 '문화적 충돌'로 해석한다. 한편 김용철·김준우(Kim & Kim 2009)의 연구는, 2008년 촛불시위 참여집단의 분석을 통해, 인터넷의 확산이 '참여적' 정치문화의 창출과 기존 정치적 무관심층(학생과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촉발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즉 인터넷의 확산이 단지 기왕의 정치참여집단에게 추가적 정치참여 수단만을 제공한다는 '강화론'(reinforcement) 시각을 비판하고, 인터넷의 대중화가 새로운 정치참여집단의 창출은 물론이고 새로운 정치문화의 생성에도 기여한다는 '변형론'(transformation)적 시각의 유효성을 제기한다. 이와 유사한 주장은 윤성이(2009)와 조화순(Jho 2009)의 글에서도 발견된다. 즉 이들은 2008년 촛불시위 분석을 통해, 인터넷의 확산이 행위자의 태도 변화 및 정치참여 행태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현상은 '비정치적 집단의 정치참여'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2. 정치사회

인터넷의 정치적 활용이 선거정치, 정당정치, 의회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몇 가지 경쟁적 가설들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즉 선거정치와 관련하여 '변화가설 vs. 정상화가설'의 적실성 논쟁이, 정당정치와 관련하여 '정당쇠퇴론 vs. 정당강화론'의 적실성 논쟁이, 그리고 의회정치와 관련하여 '의회정치의 활성화론 vs. 의회정치의 쇠퇴론'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의 활성화 방안 및 전략이 논의되어 왔다.

1) 선거정치

선거정치 영역에서 인터넷의 정치적 활용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체로 세 개의 주제 - (i) 정당간 선거경쟁도, (ii) 온라인 정치인 팬클럽, (iii) 인터넷(전자)투표의 도입과 그 효과 - 로 압축된다. 흥미로운 것은 연구주제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두 개의 상반된 이론적 가설 - 변화가설 vs. 정상화가설 - 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었다. 변화가설(change hypothesis)은 인터넷의 확산이 기존의 정치과정에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며, 정상화가설(normalization hypothesis)은 인터넷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치 판도는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첫째, 정당간 선거경쟁도의 측면에서, 변화가설은 기존 미디어 선거운동 및 면대면 선거운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인터넷 선거운동의 확산이 정당들의 유권자 동원능력의 평등화를 촉진시켜 선거운동에 있어서 거대정당과 소수정당 간의 격차가 축소될 것으로 예측한다. 이에 비해, 정상화가설은 인터넷 선거운동의 확산이 기존의 선거정치 판도를 변화시키지 못할 것으로 본다. 즉 인터넷 도입 초기에는 선거운동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인 소수당이 일시적으로 사이버공간에서 우세를 점할 수는 있으나, 결국엔 상대적으로 풍부한 재정적 능력을 보유한 다수당이 높은 수준의 인프라와 웹사이트를

구축하면서 사이버공간에서의 선거운동 역시 다수당이 지배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가설들을 바탕으로, 인터넷 선거운동의 확산이 선거경쟁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등장한 것은 2000년대 초반 이후이다. 2002년 지방선거를 대상으로 ‘변화가설 vs 정상화가설’을 검토한 연구들에 따르면, 선거운동 웹사이트의 개설율, 접근용이성, 규모 및 세련도, 내용적 다양성과 업데이트 정도의 측면에서 다수당의 선거운동 웹사이트가 소수당의 웹사이트에 비해 훨씬 나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김용철 2004). 또한 200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홈페이지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홈페이지 구축률, 게시판 기능의 활성화 정도, 그리고 유권자 동원화 전략 등에서 소수당 후보들의 인터넷 선거운동이 다수정당 후보들에 비해 저조함을 재확인하고 있다(곽진영·고선규 2006). 그리고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인터넷 선거운동을 분석한 연구(윤성이 2008, 209-210)는 정당 및 후보자의 선거운동 웹사이트 방문자들이 다수당에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정상화가설의 적실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

둘째, 온라인 정치인 팬클럽(fan club)의 등장 배경, 조직 및 활동 등에 대한 연구이다. 한국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최초의 정치인 팬클럽은 ‘노사모’이다. 2002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노사모의 활약은 매우 인상적인 것으로,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이회창 후보에 15%이상 뒤지는 상황에서, 노무현 후보가 선거의 주도권을 잡는데 크게 기여하였다(윤성이 2003). 온라인 모임은 오프라인 조직에 비해 ‘가입’과 ‘탈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소규모 온라인 모임으로 출발했던 ‘노사모’가 대규모의 멤버십을 거느린 온라인 정치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자체가 매우 놀랍고 흥미로운 현상으로 파악되었다. 노사모의 성공은 대체로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 하나는 노사모가 ‘지역주의 타파’라는 정치적 유인(political incentive)을 통해 독특한 집단정체성을 생성해 내는데 성공하였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적절한 결합을

통한 ‘놀이와 재미’라는 ‘연대적 유인’(solidary incentive)을 효과적으로 창출하였기 때문이다(강원택 2004).

노사모의 활약상은 이후 대통령 선거운동 양상에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 대선 때마다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온라인 팬클럽이 형성되었다. 이들 정치인 팬클럽은 다분히 개별 정치인의 선거승리 목표로 조직되었고, 선거과정에서 후보자와 유권자 간의 증개 및 후원 활동을 하는 선거머신(electoral machine)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장우영·송경재 2007). 하지만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주요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팬클럽들의 분포 및 방문객 수는 유력 정치인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나, 사이버공간의 정치인 팬클럽들 역시 오프라인의 현실 정치 판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장우영 2008; 윤성이 2008). 이는 정치적 가용 자원의 동원능력이 높은 다수당 후보(혹은 유력 정치인)들이 오프라인 공간을 지배하듯이 사이버공간 역시 다수당 후보(혹은 유력 정치인)들이 지배할 것이라는 정상화가설의 적실성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인터넷(전자)투표의 도입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이다. 우선 김용철(2003)은 미국 사례분석을 통해 한국의 인터넷투표 도입 가능성을 진단한다. 인터넷투표의 편의성과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달리 한국사회는 인터넷투표 도입의 시급성이 별로 존재하지 않으며, 나아가 인터넷투표에 내재된 기술적 보안상의 문제점, 디지털 디바이드의 가능성, 그리고 불건전한 선거풍토로 인한 부정선거 발생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국내에서 인터넷투표의 도입은 신중하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해외의 전자투표 추진 현황 분석을 통해, 한국에서 전자투표 도입은 기술적 신뢰성 및 안전성의 확보(류석진 김용복 2009) 그리고 정치사회의 합의(정연정 2005; 김면희 2007) 및 시민사회의 신뢰 획득(조희정 2007)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비해, 전자투표 도입의 기대효과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이현우(2001)는 2000년 미국 애리조나 민주

당 예비선거 사례분석을 통해 인터넷투표의 도입이 투표율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으나, 정보격차로 인한 일부 사회집단의 과잉대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에 비해, 김용복(2007)은, 일본의 전자투표 사례들의 검토를 바탕으로, 전자투표의 실시가 무효표를 제거하고 선거행정업무의 간소화와 효율화에 기여하나, 전자투표의 도입이 투표율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정당정치

“인터넷의 확산이 정당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둘러싸고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되었다(김용철·윤성이 2005, 126-133). 그 하나는 ‘정당쇠퇴론’이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의 확산이 국가와 시민들 간의 직접적인 협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은 더 이상 자신의 의사결정권을 정치적 대표자에게 위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본다. 그 결과, 정당의 기능은 급속히 약화되거나, “정당 없는 정치”(partyless politics)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정당강화론’이다. 이에 따르면, 정보화의 진전에 대해 정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적응하여 정치과정에서 정당의 위상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즉 정당은 인터넷 기술을 적극적으로 채택·활용함으로써, 정당 조직 및 당내 민주주의의 강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시민사회와 정당을 연계시켜, 자신의 지지자들을 충원하고 규합해 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상반된 두 가설을 둘러싸고, 인터넷의 확산이 한국의 정당정치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첫째, 인터넷 기반 커뮤니케이션이 정당-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다. 박진영(2001)은 정치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접목하여 정당 웹사이트 구성과 서비스체계를 분석한 바 있다. 그는 인터넷 매개 커뮤니케이션이 정당과 시민사회 간의 연계를 활성화시키는 효과적 기제라는 전제하에, 정보의 개방성 및 투명성, 접근성과 공유성, 정보

교환의 쌍방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국 정당 웹사이트들의 정보공유 기능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방성과 투명성 그리고 쌍방향성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6년이 지난 시점에서 발표된 연구(송경재 2007)에 의하면, 한국 정당들의 인터넷 활용은 정당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인터넷의 활용은 정당지도부와 당원 간, 당원과 당원 간, 정당과 시민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는 효과를 낳고 있으며, 정당의 민주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온라인 정치인 팬클럽의 등장과 활동이 정당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다. 우선 온라인 정치결사체인 ‘노사모’와 전자정당(e-party)을 추구한 ‘개혁당’의 경험을 분석한 강원택(2005)의 연구는 인터넷의 활용이 정당의 기능 약화를 낳을 것이라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비록 인터넷이 새로운 정당이나 정치집단의 출현 가능성을 용이하게 하였지만, 인터넷이 초래하고 있는 정치적 환경변화에 대해 기존 정당들 역시 정당체계의 개방성과 반응성의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의 확산이 기존 정당 체계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으로 이어지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 이에 비해, 장우영(2007)은 정치인 팬클럽이 정당정치를 약화시킬 수 있는 위협요소를 지닌 것으로 파악한다. 즉 정치인 팬클럽은 정당의 바깥에서 형성된 ‘사인화된 정치적 결사체’인 까닭에, 이들은 정당을 우회하는 경향이 강하며 회원들의 정당일체감 역시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팬클럽 중심의 선거동원 및 이미지 정치의 확산은 정당의 사인화 및 주변화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셋째, 인터넷의 확산이 초래하고 있는 한국 정당정치의 환경 변화를 분석한 연구이다(강원택 2007). 이 연구는 ‘정당쇠퇴론 vs. 정당강화론’의 논쟁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다. 우선 인터넷의 확산이 정당정치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변화 - (i) 정치인 팬클럽과 같은 인물 중

심의 정치적 결사체의 등장, (ii) 개인화되고 파편화된 정체성의 확산, (iii) 정치참여의 동인으로서 ‘놀이와 재미,’ (iv) 대안적 매개를 통한 정치참여의 증가 -를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리고 정당의 기능 약화 혹은 강화는 결국 정당들이 얼마나 새로운 정당정치의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적응해 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3) 의회정치

의회정치와 관련한 연구는 대체로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대표성의 제고에 그 초점이 맞춰졌다. 의정활동의 대부분이 정보의 교환과 의사소통이라는 정치커뮤니케이션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은 의회민주주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가능하는 척도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묵시적으로 “의회와 의원들의 정보통신기술의 적극적 수용 및 활용 여부는 의회정치의 질적 향상 혹은 정치적 퇴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 가설에 입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첫째,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의회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인터넷을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정책제안적 성격을 지닌 연구들이다 (김용철 2004; 강재규 2004; 정충식 2005; 방민석 2006; 강장석 2007). 이들 연구들은 대체로 외국 사례연구 혹은 비교연구를 통해 한국의 의회의 인터넷 활용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다양한 연구방법을 이용한 국회의원들의 웹사이트 활용 행태 및 실태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다. 먼저 박재창(2004)은 국회의원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정치정보의 수집, 배포, 협의와 대화 기능을 조사하였는데, 그 가운데 33.0%가 전자 여론조사를 통한 정보수집을, 47.8%가 뉴스레터를 통한 정보 배포를, 그리고 57.7%가 토론방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단순한 정치정보의 수집 및 배포 보다 대화와 참여의 공간 확대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선

지역구의원일수록 지역유권자의 여론을 파악하려는 ‘정보관료형’ 의사소통에 관심이 높으며, 신참의원으로 전국구 출신일수록 지역주민의 접근 및 자신의 의정활동을 선전하려는 ‘시장개척형’ 의사소통에 관심이 높으며, 지역구 출신의 젊은 국회의원일수록 쌍방향 의사소통에 적극적인 ‘인터넷 의사소통형’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삼열·류숙원(2007)은 제17대 국회의원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내용성(정보제공, 정치활동, 의사소통, 자원동원), 접근성(시각장애인 접근성, 개인정보보호정책, 접근성), 그리고 반응성 및 참여도의 분석과 평가를 통해 국회의원의 사이버 의정활동의 실태를 살펴보고 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자신의 웹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가운데 100점 만점에서 81점 이상의 점수를 받는 웹사이트가 2개, 61-80점은 57개, 41-60점은 169개, 21-40점은 57개로 조사되어 의원 웹사이트의 질적 수준은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당별로 보았을 때,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의 웹사이트가 평균 59.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는 민주노동당의 대중당적 성향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박한우(2005)는 하이퍼 링크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온라인 공간에서 국회의원 웹사이트들의 상호작용(항해환경) 구조를 검토한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국회의원 웹사이트들이 가장 많이 아웃 링크하고 있는 곳은 정당, 지방정부, 국회, 중앙정부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국회의원들의 비공식 연구모임 및 국회상임위에 대한 링크는 매우 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IV. 인터넷 안의 정치와 인터넷에 영향을 주는 정치

‘인터넷 안의 정치’가 오프라인 정치와 대비되는 온라인 공간의 자율적 정치라면, ‘인터넷에 영향을 주는 정치’는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해 제기되는 다양한 온라인 공공현안을 둘러싼 오프라인 정치현상을

의미한다.

1. 인터넷 안의 정치

‘인터넷 안의 정치’에 해당하는 기존 연구들의 분석대상은 사이버 공동체이다. 이 점에서 한국 사례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안의 정치’가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서이중(2002)의 저서이다. 그는 한국사회에서 사이버 공동체의 등장 배경, 공동체의 유형과 내부적 특징 등을 분석·제시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촉발시켰다. 이후 이 분야의 연구는 기존 논쟁적 가설 및 의문점들에 기초하여, 사이버 공동체의 내부 동학, 규범의 형성, 사회적 자본의 형성 등 대체로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첫째, 온라인 공간에서의 상호작용은 익명성, 선택성, 공시성 등의 차원에서 전통적인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상호작용과 구분된다. 이 점에서, 온라인 토론공간에서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학자들의 관심 대상이 되었다. 이준웅·김은미·김현석(2007)은 온라인 게시판 참여자들을 ‘의견지도자’(게시글이 다른 참여자들의 주목을 유발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해 내는 사람), ‘관심유발자’(게시글이 타인으로부터 주목을 받지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지 못하는 사람), ‘조용한 설득자’(게시글이 상대적으로 많은 주목을 이끌어 내지 못하지만, 소수 사람들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내는 사람), 그리고 ‘일반 토론자’(게시글이 타인의 주목을 유발하지도 못하고 긍정적 반응도 이끌어 내지 못하는 사람) 등으로 분류하고, 이들 네 집단의 규모, 인구통계학적 특징, 개인적 속성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의견지도자’는 10.8%, ‘조용한 설득자’는 4.4%, ‘관심유발자’는 6.9%, 그리고 ‘일반 토론자’는 77.9%로 나타났다. 그리고 의견지도자들은 대부분 남성이고, 교육수준이 높고, 일반 토론자들에 비해 다소 연령이 높은 것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정치지식을 보유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둘째, 사이버 공동체의 내부 규범의 형성과 작동에 대한 의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찬모(2003)는 설문조사를 통해 사이버 공동체의 규범 형성과 그 내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내부 규범은 통신망 운영자(사업자) 및 사이버 공동체 운영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며, 내용적으로 바른 언어 사용, 건전한 정보의 사용, 타인의 인권 존중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에 개별 사이버 공동체들이 규정하고 있는 내부규범으로 오프라인 모임에 적극 참여할 의무, 상업적 글 게시 금지, 존댓말 등 바른 국어사용 등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송경재(2005a)의 경험적 분석에 의하면, 사이버 공동체가 오래될수록 그리고 회원이 많을수록 내부 규범 및 규칙을 보유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이버 공동체들이 내분 발생에 대한 대처방안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사이버 공동체의 특성상 내분이 발생하면 공동체의 분화나 해체로 이어지거나, 내부 분쟁에 대한 학습효과로 인해 공동체 내에 보이지 않은 규범이 내재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한다.

셋째, 사이버 공동체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간의 관계를 둘러싼 세 가지 경쟁적 가설 - (i) 사이버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 강화론, (ii) 사이버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 쇠퇴론, (iii) 사이버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 창출 보완론 -을 염두에 둔 연구들이다. 이와 관련하여, 송경재(2005b)는 사례연구를 통하여 사이버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 축적 가능성을 제시한다. 특히 사이버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들의 온-오프라인 모임의 강도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장덕진·배영(2006)은 온-오프라인의 상호작용이 사회적 자본 형성 및 축적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사이버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 강화론’과 ‘사회적 자본 창출 보완론’이 ‘사회적 자본 쇠퇴론’에 비해 보다 적실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2. 인터넷에 영향을 주는 정치

인터넷의 확산은 온라인 네트워크 및 온라인 정보에 내재된 사회적 가치와 이해의 배분 그리고 규제를 둘러싼 첨예한 정치적 갈등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인터넷 자원을 둘러싼 정치적 경제적 갈등이며,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및 '정보의 소통'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과 규제 현상들이다.

1) 정보 배분의 정치

정보자원의 분배 및 규범 형성을 둘러싼 정보 배분의 정치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두 가지 가설을 기초로 진행되어 왔다. 그 하나는 정보통신기술이 자체 논리에 따라 발전하며 제반 사회경제적 변화를 이끄는 주요 추동력이 된다는 '기술결정론'적 가설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집단들의 이해관계가 특정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수요의 형성 및 기술의 내용·속도·방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구성론'적 가설이다. 이러한 상반된 가설들은 '정보 배분의 정치' 연구의 기본 출발점이 되어왔으나, 기존 연구들은 두 가설들에 대해 절충적인 입장 - 과학기술이 사회변화를 유발하는 측면과 사회가 과학기술의 변화를 규정하는 측면의 동시적 분석 -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배영자(2004)는 컴퓨터 기술 아키텍처 및 인터넷 프로토콜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이 관련 기업체, 전문가, 서버 관리자 등이 중심이 되는 수평적 질서와 권력관계에 기초한 강력한 수직적 질서에 기초한 혼합적 질서를 낳고 있으며, 과학기술이 이러한 정치적 질서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 실제로 한국에서 이동통신(IMT-2000)을 둘러싼 기술표준 선정에 대한 사례분석에 의하면, 기술표준의 채택은 세계시장, 국가, 그리고 관련 민간부문 간의 기존 질서에 변화를 낳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기술표준의 선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조화순 2003).

다른 한편, 김의영·이영음(2001)과 김유향(2001)은 인터넷공간의 주소체계(DNS)를 관리하는 국제인터넷주소위원회(ICANN)의 역할과 기능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가간의 권력의 차이가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에 의하면, DNS의 관리는 새로운 사이버공간에서의 영토확장을 위한 경쟁을 비롯한 관련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고 한다. 따라서 DNS 관리를 둘러싼 정치적 역학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해관계의 충돌 및 상충을 조화롭게 조율해 낼 수 있는 거버넌스의 구축이 시급함을 주장한다. 그러나 유현석(2005)은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SIS)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사이버공간 및 정보유통을 둘러싼 관련 당사자들의 첨예한 이해갈등이 정보자원의 협력적 관리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창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2) 정보 규제의 정치

인터넷 규제의 정치를 둘러싼 초기 논의는 '정보민주사회론' vs. '전자감시사회론'이라는 담론적 수준에서 전개되었다(고영삼 1998; 장우영 2005). 전자가 인터넷의 확산이 국가권력의 독점을 분산시키고 시민의 정치권력을 확대시켜 궁극적으로 '정보 기본권' 및 '민주주의'의 성취에 기여한다는 가설에 입각한 것이라면, 후자는 인터넷의 확산으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궁극적으로 권력기관에 의해 사회구성원이 감시·통제받는 상황이 도래될 수 있다는 가설에 기초한 것이었다. 이러한 가설들은 이후 구체적인 현실 이슈에 근거한 인터넷 규제의 정치에 관한 사례 연구들의 토대가 되었다.

첫째, '표현의 자유'와 불건전한(혹은 불법적인) 정보유통에 관한 논의이다. 이는 온라인상의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 방지를 취지로 1992년 10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동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온라인상의 표현물에 대한 규제를 가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동민(2002)은 청소년 보호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국민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보다 우월한 것이 아니라

고 한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는 국가의 법적 규제보다는 네티즌 사회의 자율적 규제를 통한 해결이 더욱 중요함을 지적한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송경재(2005c)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정치 패러디가 규제의 대상이기 보다는 일종의 참여적 의사표현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온라인 정치패러디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강내영(2008)은 한국의 '소리바다'와 중국의 '신미엔상'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국가의 인터넷 저작권에 대한 규제는 일반화된 경향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는 강화된 저작권제도가 인터넷 문화공간에서의 생산과 소비의 무한순환구조를 훼손시켜 인터넷 공간에서의 문화생산을 위축시킬 수 있음을 경고한다.

둘째,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관한 논의이다.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는 상호 상충적인 측면을 지닌다. 표현의 자유를 강력히 보호하면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농후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강력히 보호하면 자유로운 정보유통 및 정보공개와 같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다분하다(임상수 2006). 이러한 측면에서 조일수(2005)는 인터넷 공간에서 '정보인권'(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보호 등)의 효과적 보호는 법을 통한 국가권력의 개입보다는, 자율적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정보생산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강력한 프라이버시 보호기술의 활용을 통해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이나 오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국가의 개인정보의 축적 및 활용에 대한 논의이다. 2002년 정부의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도입과 관련하여, '정보행정의 효율성'과 '정보인권 침해론'이 첨예하게 대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장우영(2004)은 정보기술의 사회구성론적 시각을 적용하여, 기술 효율성의 논리에 경도된 정부의 정책실행이 인권침해 우려 및 저항을 초래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NEIS 정책의 수정을 가져왔다고 지적한다. 조화순(2005) 역시 사회구성론적 시각에서 정부의 전자주민카드 도입정책이 정보사회의 균열구조와 국가-시민사회 및 시민사회 내부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음을 분석하면서, 실천적

측면에서 정보사회의 민주적 질서 구축을 위하여 정보기본권의 정립 및 기득 세력에 대한 적절한 통제 메커니즘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넷째, '익명제 vs. 실명제'를 둘러싼 논쟁이다. 이 논쟁은 2004년 개정 공직선거법을 통해 인터넷 선거계시판에 실명제가 도입되고, 이후 2005년 이른바 '개똥녀 사건'과 '연예인 X파일'을 계기로 정부가 실명제를 인터넷 계시판 전반에 확대시키려 과정에서 증폭되었다.²⁾ 그리고 정부는 2007년 1월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을 통해 이른바 '일반계시판 실명제'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실명제의 입법화에 대해, 이항우(2008)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회적 차원에서 실명제 찬성에 대한 인지적·규범적·정치적 담론 자원 및 전략을 성공적으로 동원·구사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황용석(2007)은 온라인 공간에서 익명제와 일탈행위의 높은 상관관계를 전제로 인터넷 실명제가 추진되었지만, 경험적 연구들은 익명성과 일탈행위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지지해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여라(2008)는 인터넷 실명제의 실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법적 강제력에 의존하기보다는 건전한 사이버 문화의 조성을 통한 사이버공간의 개방성과 익명성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제의한다(김여라 2008).

V. 결론: 요약 및 향후 과제

지금까지 우리는 세 차원에서 사이버 정치현상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인터넷의 정치적 활용'을 둘러싼 기존 연구는

2) 실명제 도입 찬성론자들은 익명성이 개인정보의 유포 및 언어폭력을 통한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과 같은 인권 침해적 역기능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고, 반면 실명제 도입 반대론자들은 인터넷 실명제의 추진 논리 및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으며, 실명제 도입으로 인한 개인정보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인터넷의 확산이 일반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동원론’과 ‘강화론’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왔으며, 그 가운데 강화론적 시각이 힘을 얻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온라인 토론의 경우 ‘공론장’ 모델과 ‘과편화’ 모델이 경쟁하고 있으며, 사회운동의 경우 ‘강화론적 시각’ 보다 ‘변형론적 시각’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그리고 선거정치 영역에서는 ‘변화가설’보다는 ‘정상화가설’이 더욱 현실적 유효성을 지닌 것으로, 정당정치의 경우 ‘정당쇠퇴론’과 ‘정당강화론’의 논쟁을 탈피하고 인터넷의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동시에 검토하는 ‘유보론적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의회정치의 수준에서 의정활동의 대표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순수한 온라인상의 정치를 의미하는 ‘인터넷 안의 정치’의 경우, 사이버 공동체 내부의 정치 역학적 실태 및 규범 형성, 그리고 사회적 자본의 형성 및 축적 가능성에 대해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사이버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 형성 가능성을 둘러싸고, 기존 연구들은 ‘사회적 자본 강화론’ 및 ‘사회적 자본 창출 보완론’이 ‘사회적 자본 쇠퇴론’에 비해 보다 적실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한편, 정보자원을 둘러싼 오프라인 정치를 의미하는 ‘인터넷에 영향을 주는 정치’의 경우, 크게 정보배분의 정치와 정보규제의 정치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전자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은 기술결정론과 사회구성론의 절충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후자와 관련하여, 두 가지 논쟁적 시각 - 정보민주화론과 전자감시사회론 -을 논의의 배경으로 삼아, 외부권력의 강제적 규제보다는 네티즌들의 자율적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인터넷의 확산이 한국의 정치과정에 미치는 영향들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여 왔다. 그러나 체계적인 사이버정치학의 정립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들은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연구 분야의 균형적 발전이 필요하다. 연구 주체의 측면에서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은 ‘인터넷 활용의 정치’에 편중되어 있으며, ‘인터넷 내의 정치’와 ‘인터넷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다. 인터넷이 대중화됨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사이버 공동체의 영향력은 꾸준히 증대하고 있으며, 정보자원의 분배와 규제는 정치적 갈등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된 이들 분야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는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이버 정치현상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들이 유기적 연관성을 지니면서 진행되기 보다는 특정 세부 주제에 매몰되어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 결과, 사이버 정치현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 및 체계적인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정치현상은 연쇄적 혹은 상호작용적 인과관계를 내재한다. 예컨대, ‘인터넷 안의 정치’ 현상이 ‘인터넷에 영향을 주는 정치’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활용의 정치’의 중요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이와는 반대의 방향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셋째, 사이버 정치현상에 대한 비교론적 연구가 필요하다. 인터넷은 가치중립적인 기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기술을 채택하고 이용하는 방법 및 방향, 온라인 공간의 윤리와 규범의 내용, 그리고 인터넷 자원을 둘러싼 경쟁과 인터넷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내용은 국가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즉 정치체제, 정치문화, 정치과정의 특징, 경제적 수준 등과 같은 지역적 특정 변수들을 고려한 비교론적 연구들을 토대로 다양한 가설들의 창출과 검증은 통해 사이버 정치현상 연구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고 심화시켜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강내영, 2008, “한중 인터넷상의 저작권 규제현상 연구: ‘소리바다’와 ‘산미엔상’을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제10집 1호, pp. 53-93.
- 강상현, 1999, “전자민주주의와 시민참여: 사이버스페이스의 참여민주적 공간화를 위하여,” 크리스찬 아카데미 (편), 『시민이 열어가는 지식정보사회』 서울: 대화출판사.
- 강원택, 2004, “인터넷 정치집단의 형성과 참여: 노사모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0권 3호, pp. 161-184.
- , 2005, “정보화,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변화 혹은 적응?” 『한국과 국제정치』 제21권 3호, pp. 127-149.
- , 2007, 『인터넷과 한국정치: 정당정치에 대한 도전과 변화』 서울: 집문당.
- 강장석, 2007, “국회의 전자적 공론장 형성을 통한 전자민주주의 발전 모색,” 『의정연구』 제13권 2호, pp. 73-109.
- 강재규, 2004,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 IT활용방안,” 『공법학연구』 제5권 1호, pp. 267-294.
- 고동현, 2002, “정보사회의 도전과 사회운동의 새로운 전개: 한국 사이버 사회운동의 유형과 동학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곽진영, 2001, “한국 정당의 사이버공간을 통한 정치커뮤니케이션: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홈페이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5집 2호, pp. 135-157.
- 고선규, 2006, “제17대 총선 후보자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 『21세기정치학회보』 제16집 2호, pp. 247-268.
- 권기현, 1999, “정보화와 시민공동체,” 크리스찬 아카데미 (편), 『시민이 열어가는 지식정보사회』 서울: 대화출판사.
- 김동민, 2002, “정보사회와 표현의 자유,” 『정치정보연구』 제5권 2호, pp. 137-170.

- 김면희, 2007, “전자투표 도입 현황과 전망: 네덜란드와 독일,” 『유럽연구』 25권 2호, pp. 39-65.
- 김종길, 2005, “정보사회의 전면화와 NGO의 응전: 우리나라 NGO의 인터넷 활동 특성 및 조직변화에 관한 연구,” 『담론 201』 7(2), pp. 191-225.
- 김여라, 2008, “인터넷 실명제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제3호.
- 김용복, 2007, “일본의 정보화, 인터넷 선거운동 그리고 전자투표: 제도와 현실,” 『일본연구논총』 제26호, pp. 1-37.
- 김용철, 2003, “인터넷투표: 미국의 실험과 한국에서의 전망,” 『한국정치학회보』 37집 5호, pp. 127-167.
- , 2004, “인터넷과 의정활동: 이메일 활용과 토론방 운용을 중심으로,” 『국회도서관보』 6월, pp. 39-47.
- , 2004, “한국과 미국 정당들의 인터넷 선거운동과 경쟁양상,” 『한국정당학회보』 3권 1호, pp. 63-94.
- , 2008a, “정보화시대의 사회운동: 온라인 사회운동의 유형과 특징,”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25권 1호, pp. 5-42.
- , 2008b, “촛불시위의 동학: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만남,” 『정보화정책』 제15권 4호, pp. 120-139.
- 김용철 윤성이, 2004, “제17대 총선에서 인터넷의 영향력 분석: 선거관심도와 투표참여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8집 5호, pp. 197-215.
- , 2005, 『전자민주주의: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의 모색』 서울: 오름.
- 김유향, 2001, “인터넷 거버넌스의 국제체계: ICANN 성립과 그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엮음), 『정보사회와 정치』 서울: 오름. pp. 223-248.
- 김일영, 2004, “민주화, 신자유주의적 포퓰리즘, 그리고 한국,” 철학연구회 (편), 『디지털시대의 민주주의와 포퓰리즘』 서울: 철

- 학과 현실사, pp. 190-224.
- 김의영, 2004, “인터넷을 통한 NGO의 정치참여: 유형과 현황,” 『한국과 국제정치』 제20권 4호, pp. 229-261.
- 이영음, 2001, “인터넷 거버넌스: 도메인네임체계 관리의 정치,” 한국정치학회 (엮음), 『정보사회와 정치』 서울: 오름. pp. 189-219.
- 김은규, 2005, “초국적 사회운동과 인터넷 네트워크의 역할에 대한 연구: 독립미디어센터(IMC) 네트워크의 구조 및 운영원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9권 5호, pp. 254-282.
- 류석진 김용복, 2009, “전자투표 논의의 쟁점과 현실: 한국과 일본의 비교,” 『한국정치연구』 제18집 2호, pp. 127-158.
- 고홍석, 2007, “전자게시판 토론 참여자의 토론능력과 숙의적 토론과의 관계,” 『언론정보연구』 통권 44-1호, pp. 5-35.
- 민경배, 2002, “정보사회에서의 온라인 사회운동에 대한 연구: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선희 주정민, 2004, “16대 대통령선거에서 인터넷 대안언론의 영향력: 오마이뉴스 이용자 집단의 온라인 정치활동과 투표행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8권 5호, pp. 214-243.
- 박재창, 2004, “강화형 의사소통과 국회의원 홈페이지,” 『대한정치학회보』 제12집 1호, pp. 213-226.
- 박한우, 2005, “제16대 및 제17대 국회의원 웹사이트의 링크 분석,” 『의정연구』 제11권 1호, pp. 193-221.
- 방민석, 2006, “지방의회 입법과정에서의 ICT 활용과 향후 과제,” 『도시행정학보』 제19집 2호, pp. 141-167.
- 배옥인, 1999, “네트와 새로운 사회운동,” 『동향과 전망』 통권 43호, pp. 123-143.
- 배영자, 2004, “과학기술의 국제정치학을 위한 시론: 글로벌 거버넌스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8집 3호, pp. 235-254.
- 유현석, 2005,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국가와 지구시민사회: WSIS 사례를 통해서 본 글로벌 거버넌스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39집 3호, pp. 331-352.
- 윤민재, 2005, “네트워크 시대의 사회운동: 인터넷과 초국적 사회운동을 중심으로,” 『담론 201』 8(2), pp. 93-129.
- 윤성이, 2003, “16대 대통령선거와 인터넷의 영향력,” 『한국정치학회보』 37집 3호, pp. 71-86.
- , 2008, “17대 대선에 나타난 온라인 선거운동의 특성과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42집 2호, pp. 203-230.
- , 2009, “2008년 촛불과 정치참여 특성의 변화: 행위자, 구조, 제도를 중심으로,” 『세계지역 연구논총』 27집 1호, pp. 315-334.
- 윤영민, 2000, 『사이버공간의 정치』,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 윤영철, 2000, “온라인 게시판 토론과 숙의민주주의: 총선연대 사이트의 게시판 분석,” 『한국방송학보』 통권 14-2호, pp. 109-150.
- 서이종, 2002, 『인터넷 커뮤니티와 한국사회』 서울: 한울 아카데미.
- 송경재, 2005a, “사이버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과 네트워크 정치참여,” 『한국정치학회보』 39집 2호, pp. 423-443.
- , 2005b, “자발적인 시민참여 사이버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에 관한 사례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19호, pp. 221-254.
- , 2005c, “인터넷 정치 패러디와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규제의 사회적 동학을 중심으로,” 『사회이론』 28권, pp. 7-38.
- , 2007, “e-party, 정당위기의 대안인가?” 『21세기정치학회보』 제17집 1호, pp. 21-44.
- , 2009, “네트워크 시대의 시민운동 연구: 2008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제2권 1호, pp. 55-82.

이동수, 2004, “디지털시대의 토의민주주의,” 철학연구회 (편), 『디지털시대의 민주주의와 포퓰리즘』 서울: 철학과 현실사, pp. 72-93.

이명아, 2007, “노동운동의 인터넷 활용과 정보화: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제15권 4호, pp. 19-50.

이삼열 류숙원, 2007, “국회의원 사이버 의정활동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의정연구』 제13권 1호, pp. 149-188.

이유진, 1997, “PC통신, 인터넷과 한국의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에 대한 고찰,” 『한국정치학회보』 31집 1호, pp. 141-163.

이준웅 김은미, 2006, “인터넷 게시판 토론과 정치 토론 효능감,” 『한국언론학보』 50권 3호, pp. 393-423.

———·김현석, 2007, “누가 인터넷 토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온라인 의견지도자의 속성,” 『한국언론학보』 51권 3호, pp. 358-384.

이준웅 김은미·문태준, 2005, “숙의민주주의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구조적, 규제적 조건과 인터넷 토론의 양과 질: 제17대 총선관련 인터넷 게시판 토론을 대상으로,” 『한국언론학보』 49권 1호, pp. 29-56.

이한구, 2004, “디지털시대의 다양한 민주주의와 그 정당성,” 철학연구회 (편), 『디지털시대의 민주주의와 포퓰리즘』 서울: 철학과 현실사, pp. 94-103.

이항우, 2008, “사이버 폭력의 사회적 구성과 인터넷 실명제: 비판적 담론 분석,” 『경제와 사회』 제79호, pp. 112-155.

이현우, 2001, “인터넷투표와 대표성의 문제: 2000년 미국 애리조나 민주당 예비선거,” 『한국정치학회보』 35집 3호, pp. 379-396.

———, 2005, “2030세대와 참여정치 거버넌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

임상수, 2006, “정보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 자기결정권,” 『국민윤리연구』 제62호, pp. 69-91.

장덕진·배영, 2006, “사이버공간의 공동체와 연결망,”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19호, pp. 175-217.

장우영, 2004, “정보기술의 정치적 제도화: NEIS 도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8집 3호, pp. 163-189.

———, 2005, 『인터넷 규제와 거버넌스의 정치』 서울: 한국학술정보.

———, 2006, “정치적 기회구조와 사회운동: 총선연대와 노사모의 사이버액티비즘을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제13권 3호, pp. 49-68.

———, 2007, “ICTs와 정당의 ‘적응’: 정치인 팬클럽의 역할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7집 1호, pp. 95-118.

———, 2008, “인터넷과 선거캠페인: 17대 대선 UCC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2집 2호, pp. 171-201.

———·송경재, 2007, “정보화시대의 선거와 유권자”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22호, pp. 237-262.

정연정, 2005, “미국의 전자투표: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9집 3호, pp. 283-301.

———, 2008, “글로벌 시민지식 네트워크: 노인·기아·인권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세계정치9』 제29권 1호, pp. 189-255.

———·조성대, 2004, “한국 네티즌의 주요구성과 정치적 특성: 17대 총선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10권 3호, pp. 117-146.

정영수, 2008, “건강한 정치참여를 위한 온라인 토론 합리화 방안,”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이슈 리포트 08-12호.

정찬모, 2003, “실증조사를 통해 본 사이버윤리와 규범,”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12호, pp. 165-186.

정충식, 2005, “선진국의 사례를 통한 전자투표의 가능성 모색: 미국과 영국의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의정연구』 제11권 2호, pp. 169-195.

조동기 오영석·조희경, 2001, “사이버공간에서의 여론형성과 집합

- 행동,”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 01-24.
- 조성대 정연정, 2006, “사이버거뮤니티와 정보접근, 그리고 정치참여: 17대 총선과정에 나타난 인터넷의 정치적 효과,” 『한국과 국제정치』 제22권 2호, pp. 29-62.
- 조일수, 2005, “정보 인권의 보장 방안에 대한 연구,” 『국민윤리연구』 제60호, pp. 211-234.
- 조화순, 2003, “IMT-2000 기술표준정책의 정치경제,” 『국제정치논총』 43집 1호, pp. 69-87.
- , 2005, “정보사회의 국가권력과 개인정보: 한국의 전자주민카드 도입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9집 2호, pp. 445-464.
- 황근, 2001, “사이버공간에서의 정치커뮤니케이션 양식 분석 연구: 제16대 총선후보자 사이버 게시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16호, pp. 207-254.
- 홍성구, 2001, “숙의민주주의와 인터넷 시민미디어,” 『언론과 사회』 9권 4호, pp. 173-208.
- 황용석, 2007,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 익명적 표현의 권리를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5권 2호, pp. 97-130.
- Jho, Whasun, 2009, “The Transformation of Cyberactivism and Democratic Governance in Korea: The Role of Technology, Civil Society, and Institutions,” *Korea Observer*, 40:2, pp. 337-368.
- Kim, Yong Cheol and June Woo Kim, 2009, “South Korean Democracy in the Digital Age: The Candlelight Protests and the Internet,” *Korea Observer*, 40:1, pp. 53-83.
- Margolis, Michael and David Resnick, 2000, *Politics As Usual: The Cyberspaces Revolution*. Thousand Oaks: Sage.

Research Trends and Tasks of Cyberpolitics in Korea

Kim, Yong-cheo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Cyberpolitics, composed of “Political Use of the Internet,” “Intra-Internet Politics,” and “Politics that Affects the Internet,” represents a new research area. Over the last 10 years, many studies have been published and have contributed to the understanding of the influences of the Internet on politics. This paper examines existing studies on Korean cyberpolitics and suggests future research directions.

Based on a review of the Korean cyberpolitics literature,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First, in terms of research topics, a balanced research focus would be beneficial. Second,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should be adopted previous studies have tended to approach the subject with a narrow perspective. Third, a cross-national comparison would be insightful.

Keywords : Internet, Cyberpolitics, Political use of the Internet, Intra-Internet Politics, Politics that Affects the Internet.